# 몸 ቻ 與野 ··· 국감 2R 본격 진검승부

여야, 초반 일주일 셀프 호평 野, 최저임금·부동산 정책 등 각 상임위 전방위 공격 예고

여야가 15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2라운 드에 돌입한다. 초반 국감은 여야 모두 상 대를 압도할 만한 이슈를 만드는 데 실패 했다는 평가다. 여야는 몸풀기를 마친 만 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펼치 겠다는 각오다.

일단 여야는 지난주 국감에서 우세했다 는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평화·경제·개 혁'이라는 4대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 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국당을 항해서는 구태만 반복하며 '야 당의 무대'인 국감장을 지배할 동력을 잃 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5일 재개하는 국감에서도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 세에는 튼튼한 '방패'역할을 하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하겠다는 방 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초반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기 알바'를 만들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2주 차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 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등 정부 핵심 정 책의 부작용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 다는 각오다.

또, 평양정상회담 후 발표된 남북군사 합의,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반입



주말인 14일 국회에서 관계자가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종합 상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놓고 문제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문재인 케어가 사회적 갈등비용만 추가하고 부동 산대책과 교육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보면 서 각 상임위에서 전방위로 문제 삼을 작 정이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국감에 비교적 충 실했다고 평했다. 또 정부 정책의 부작용 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대안 제시로 다 른 야당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당 차 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핵심 메시지를 브리핑하는 한편 매일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이들을 국감대책회의에 참석시 켜 이슈를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진 민주평화당은 의원들의 개인기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중진들 을 필두로 최경환, 김경진 의원 등이 각 상 임위에서 나름 돋보이는 활약을 보이고 있 다는 평가다. 당 차원의 역량은 밀리고 있지만 국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치적 존재감을 살려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국을 뒤흔들만한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야권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야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남북 고위급회담 철도·도로 연결 논의

대표단 확정…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도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 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 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 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 북 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 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 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 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 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는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 이행방 안 논의를 위해 6월 1일 열었던 고위급회 담의 대표단 구성과 대체로 같다. 다만 북측에서는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대 신 도로 담당인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넣었고 남측에서는 김남중 실장 대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들어갔다.

남북 모두 대표단에 철도·도로 담당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만큼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북측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 관련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않아 무산됐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 봉·영상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일 정도 고위급회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조속히 가동 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연합뉴스

#### 여야 "대통령 유럽순방, 평화 구축 지지 얻길"

여야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지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 평에서 "이번 유럽 순방의 핵심 주제는 평화와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 비핵화 에 대한 지지 확보는 물론 한국과 EU의 통상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됐 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 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 령의 이번 유럽 순방은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협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성공적인 순방을 기원한다"며 "북 한 비핵화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의 큰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유럽 순방 기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방국의 공감과 지지를 확산하고, 많은 지혜를 얻어오길 바란 다"며 "교황 방북 성사를 위한 노력이 빛 을 발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EU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와 협력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한국당, 황교안·오세훈·원희룡 영입 추진

내년 전대 앞두고 보수대통합…바른미래 "우리가 우파 중심"

자유한국당이 최근 들어 연일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문재인정권에 맞서려면 보수 결집이 절실한다는 판단에서다. 당내 인적쇄신 작업과 외부 인재 영입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은 그래서 주목된다.

최근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 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당 밖 인사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대상은 보수 진영 차기 주자들 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으로, 당 지 도부는 이들의 입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런 움직임은 2020년 총선 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내년 초 전당대회 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대를 통한 새 지도부 출범 때까지를 활동기한으로 잡는 김병준 비대위는 보수대통합을 임기 안에 완수해야 할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전대를 보수대통합의 대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큰 관심을 끄는 영입 대상인 황 전 총리는 지난달 한국당 일부 의원과 오찬을 한데 이어, 내달 초한국당 의원 10여명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있다. 오 전 시장도 오는 20일 지지자들과 등산을 하기로 하는 등 여러 모임을 갖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입당 의사를 굳혔으나, 시점을 조율 중이라는 말이 나돈다.

6·13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때 친정이었던 한국당에 돌 아올 기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한국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패배 후 휴 식기를 갖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당 지도부에서는 잠 재적 대권주자로 분류하고 있다.

당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돼 사실상 특위를 진두지휘하는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통합과 양당제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과 접촉해 영입에 나설뜻을 밝힌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에 맞물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사는유승민 전 대표다.당 지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전 대표에 대해 "보수통합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다소 선부르지만 바른미래 당과의 통합의 필요성까지 거론하기도 한 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 계심을 드러내며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 이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 없어져야 할 정 당"이라고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우파를 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혔 다.

손 대표는 중도개혁세력으로 재편된 바른미래당이 우파의 중심이 되고, 그 왼쪽에 더불어민주당이 자리해 양대 축을 이루고 그 좌우로 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자리 잡는 다당제를 자신의 구상으로 밝혔다.

하지만 유 전 대표와 바른정당 출신 중 진 의원들이 당내 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 고 있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 로 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한국 당이 개혁과 쇄신 작업으로 통합의 명분을 쌓아가고 보수 진영에서 '분열은 안 된다' 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면 보수 빅텐트론 같은 야권 정계개편 논의가 촉발될지 모른 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

## 민주,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창업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경영권 방어 용이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 자로 하는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에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당 내외 반 발이 만만치 않아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 법 도입 때와 같은 상당한 진통을 예고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번 정기국회내에 차등 의결권 도입을 추진할계획"이라며 "일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

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 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현행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 아래서는 기업 공개나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해 벤처기업이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차등의결권 제도의 취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